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1-학인-00010 반성문 작성 강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피해자 어머니)
피 해 자 □□□(○○○○학교 ○-○ 학생)
피 신 청 인 ㉡㉡㉡(○○○○학교 ○-○ 담임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제하여, 피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정하는 강사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교사가 학생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사례가 관내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교

사 연수, 사례전파, 인권교육 등 포함)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학교 학교생활규정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교사 연수, 사례전파, 인권교육 등 포함)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피신청인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인권우호적이지 못한 학교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학교 교직원에게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아울러, 학교생활규정을 인권우호적으로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2021. 7. 1.(목)

나. 신청인: ○○○(피해자 어머니)

다. 피해자: □□□(○○○○학교 ○-○ 학생)

라. 피신청인: ⊕⊕⊕(○○○○학교 ○-○ 담임교사)

마. 신청요지:

1) 피신청인이 2021년 6월 10일경 피해학생을 연구실로 불러서 다른 학생들 물건을 만졌는지 물었다. 그때 피해학생이 분명히 만지지 않았다고 대답했지만 종이를 주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적어오라고 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요즘 학급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있는데 피해학생이 다른 아이들 물건을 만졌다고 말하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 주라고 하였다.

2) 6월 11일(금) 오전 9시 40분경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을 연구실로 불러서 아무 것도 적어오지 않은 피해학생에게 화를 내며, “너는 안 만졌다고 해도 애들이 만졌다고 하면 너는 만진 거다” 라고 하며 반성문을 쓰라고 하였고, 피해학생이 “다른 아이들도 자기 물건을 만졌다”고 했지만 피신청인이 그냥 연구실을 나갔다.

3) 6월 16일(수)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애들은 다 반성문을 쓸 거고 다 벌을 받을 거야. 특히 ○○○은 두 배로 혼날 거야. 그리고 네가 먼저 물건을 만졌기 때문에 단톡방이 생겼고,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다”라고 하며 반성문을 계속 쓰라고 하였다.

4) 6월 15일(화) 피해학생의 자리에 피신청인 막대기가 놓여 있고 책상에 네임펜으로 ‘도둑○’이라고 써 있었다. 피신청인이 1교시에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 그 아이 자리에 남의 물건을 올려놓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해학생이 피신청인에게 ‘학교에 와보니 (막대기가)

자리에 있었고 책상에 ‘도둑○’이라고 써 있다’고 알렸으나 “1교시에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다”라고만 하고 피해학생의 자리에 가서 확인도 하지 않고, 누가 그랬는지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2. 관련규정

[붙임] 과 같다.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주장

2021년 5월경 교실에서 분실물이 많았고, 5~6월(6월 10일 이전까지)에 최소 5회 이상 남의 물건 만지지 말라고 지도했다.

6월 초경 여학생 몇 명이 찾아와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의 물건을 만진 것을 봤다며 약 8가지(물건)를 만지는 걸 직접 보았다고 했다. 그래서 연구실로 피해학생을 불러서 물어봤고, 다른 학생의 물건을 만진 것이 있으면 종이에 적어보라고 했다. 피해학생이 한 개를 만졌다고 적었고, 다른 학생이 말한 내용과 차이가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추가적으로 만진 것이 있으면 적고 없으면 그냥 가져오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안 만졌다고 해도 애들이 만졌다고 하면 만진 거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6월 8일, 피해학생이 적어온 종이를 확인했는데 추가된 내용이 없어서 피해학생에게 “만진 게 없어서 안 적은 거냐? 아니면 만진 게

기억나지 않아서 안 적은 거냐?”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었다. 또, 다른 학생들이 말했던 물건을 만졌는지 피해학생에게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피해학생이 한 개 만졌다고 인정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행동이므로 그것에 대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학교폭력 문제가 생겨서 관련 학생을 지도하면서, 피해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물건을 만진 것에 대해 총 3회(6월 8일, 16일, 17일) 반성문을 쓰도록 했고, 피해학생이 3회 반성문을 썼다.

피해학생 이외에도 학교폭력 발생 이후 두 번 또는 세 번 반성문을 쓴 학생이 있다. 반성문은 감지인데 피해학생만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학생도 이 양식으로 반성문을 작성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졌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40회 반복 작성하도록 했다.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이유는,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반성문을 작성하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반성문 쓰기를 선택하였다.

반성문의 교육적 효과는 처음 ○○○과 ○○○이 감지를 썼는데, 제가 기대했던 자기의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효과를 얻은 것 같았다. 그런데 이후 감지도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감지 작성에서 다른 형태로 방법을 바꿨고, 그래서 반성문 양식이 여러 가지이다. 반성문 작성 기간은 학생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을 봐가면서 정하였다.

2021년 6월 15일(화)경 1교시 전에 피해학생이 (자신의) 책상 위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있었다고 이야기 해서, 1교시에 바로 학생들을 지도 (남의 책상에 물건을 갖다 놓는 행동은 잘못된 것)하였다. 피해학생 책상

위에 물건이 있던 것은 기억나지만 “도둑○”이라는 단어는 기억에 없다.

칼림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체 학생들에게 “피해학생 칼림바가 없어졌다고 하니 자기 주변에 칼림바가 있는지 찾아봐라.”라고 말했다. 피해학생이 방과 후 감지를 쓰고 가야 하는지 물었고, 제가 쓰고 가라고 하자 피해학생이 뒷자리에 앉은 남학생 이름을 말하면서 그 학생도 자기 물건을 만졌다고 이야기해서 남학생을 불러 물었는데 만진 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 이후 피해학생이 여학생이 자기 가방을 뒤졌다고 말해서, 여학생에게 확인했는데 안 뒤졌다고 해서 넘어갔다. 피해학생의 주장과 다른 학생의 주장이 달랐으나 불러서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

6월 16일(수) 피해학생을 지도하면서 “애들은 다 반성문을 쓸 거고 다 벌을 받을 거야. 특히 ○○○은 더 많이 혼날 거야” 라고 말한 거 같다.

“내가 먼저 물건을 만졌기 때문에 단톡방이 생겼고 어찌되었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너도 다른 학생의 물건을 만진 것은 사실이니까 추가적인 지도를 하겠다.”라며 반성문을 쓰도록 했으며,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반성문 작성을 안내했다.

○○○ 학생이 단톡방을 만들고 피해학생 영상을 찍어 올렸다는 것을 6월 15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문자로 단톡방 관련 내용(단톡방 만들었다는데 알아봐달라는 내용)을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 6월 18일 생활담당 선생님에게 단톡방 관련 내용을 인계했고, 이후 학교폭력 처리 과정(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관련 자료 진술(피해학생 자필 작성 기록)

1) 2021년 6월 7일 '나의 다짐' 기록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항목에 "○○의 전자노트", '내가 잘못된 점' 항목에 "다른 사람 물건을 허락 없이 만졌다.", '앞으로의 다짐' 항목에 "앞으로 다른 사람 물건을 만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성하였다.

2) 2021년 6월 16일 '나의 다짐' 기록

'앞으로의 다짐' 항목에 "난 물건을 만지긴 했지만 훔치진 않았다.", "○○의 황금꽃을 허락을 맡고 가져갔다.", '잘못한 일에 대한 반성 및 앞으로의 다짐' 항목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졌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였다.

'○○에게 쓰는 편지' 항목에 "○○, ○○, ○○에게, 안녕 ○○야 ○○야 ○○아 내가 너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져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절대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지지 않을게" 라고 작성하였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9조는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는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나. 인정사실

위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 1) 2021. 6. 7.경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의 물건을 만졌다.
- 2)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에게 2021년 6월 8일, 16일, 17일에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 3) 피해학생이 같은 문장을 40회 반복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다. 양심의 자유 침해

1) 반성문 작성 강제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는 ‘내면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당하

지 않을 자유'와 '자기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행위가 잘못임을 글로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례 16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학교에서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반성문 작성의 전제는 학생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학생이 반성문 작성을 원하지 않음에도 교사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반성문 작성을 강요, 강제하는 행위로,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반성문 제출을 요구 할 수는 있으나 학생이 이를 거부할 때는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이 반성문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담당 교사들이 협의하여 대안적 생활 교육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2021년 6월 7일경 피해학생을 불러 다른 학생의 물건을 만졌는지 확인하였고, 이후 6월 8일, 16일, 17일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졌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지 않겠습니다.” 문장을 40회 반복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형식의 반성문은 교사가 학생이 반성해야 할 내용의 문장을 학생에게 불러주고 받아쓰게 하는 방식으로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반성문이라 할 수 없으며, 같은 문장을 40회 반복하도록 한 것 또한 반성문 작성을 강요,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2) ○○○○○학교 학교생활규정의 문제

한편, ○○○○○학교 학교생활규정(2021. ○. ○○. 개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학생의 징계 규정과 같이 관련 법 조항을 임의로 학교생활규정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교원지위법 18조, 학교폭력예방법 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서면사과(반성문): ○○일 이내에 작성하여 전달한다.
- ② 접촉금지: ○○일 이내로 한다.
- ⑦ 학급교체: 학급 및 학생 수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제42조【징계 방법】

- ① “서면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문 또는 사과편지를 직접 작성해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 ② “접촉금지”는 해당 학생 간 접촉을 금지하고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제외한다.
- ⑧ “학급교체”는 학생의 지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학급으로 교체를 실시한다.

제43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면사과(반성문)
 - 1. 반성문 및 사과편지 작성 및 전달
- ② 접촉금지
 - 1. 교실 내 자리 재배치
 - 2. 교육활동이나 모둠활동 등에서 학생 간 거리 조정
- ⑦ 학급교체
 - 1. 학급의 규모와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학급으로 학생을 재배정한다.

이는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각 법령의 체계와 규정 내용이 지니는 의미를 임의로 해석하여 조합한 것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 적법 여부를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위 규정 제41조, 학교장의 직접 징계 권한은 같은 규정 제39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내용과도 모순이 있어,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학교의 위 학교생활규정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제정 취지를 벗어나 학생의 문제 행동을 생활교육의 관점이 아닌 학교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인권우호적으로 즉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라. 소결

교사가 학생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피신청인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피신청인이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여 이와 같은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해당 학교의 생활규정에서 ‘반성문 및 사과편지 작성 및 전달’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해당 학교 교원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생활규정을 개정하고, 교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특별인권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14.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붙임]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